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5-40-09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5-40-09  
연구보고서 15-54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5-40-09  
연구보고서 15-54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인쇄일 2015년 12월 26일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1614-0 94320  
978-89-322-1072-8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이 요약집은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획·수행한 협동연구  
사업의 중국종합연구 총서 요약문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원문은 [www.kiep.go.kr](http://www.kiep.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정책연구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한지 네 번째 해입니다. 올해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7개 국책 연구기관의 중국 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국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 방안의 5개 중점연구주제는 국내 중국전문기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5가지 중점 연구주제에 따라 7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과제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향후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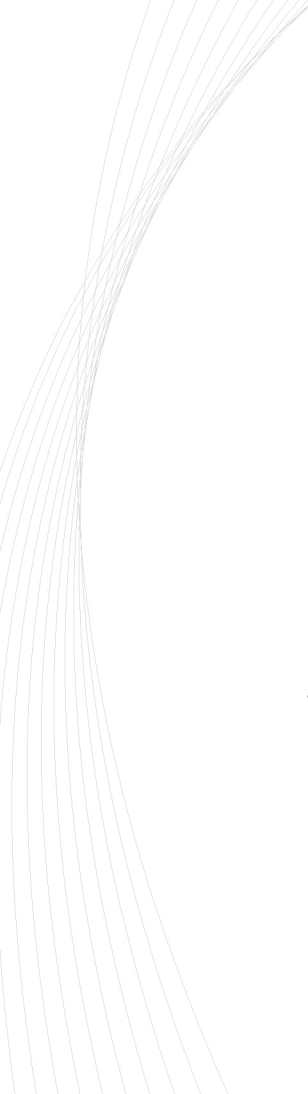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7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관계자 및 본원의 연구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일 형

I.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9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	10
II.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	17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	18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	25
IV.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	35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	36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	45
V.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	53
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	54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	59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	66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	73





# I.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김이선·김난주  
국립강릉원주대 강승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제조업 기능인력 관련 산업인력이 부족할 것임
- 한편 중국의 대졸자 노동시장 전망에 의하면 대졸자의 취업전망이 밝지 않음
- 중국인 유학생 유입전략으로 취업연계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인력부족이 예측되는 해당산업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한국은 저출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

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력은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인력수급전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기능인력의 부족이 예측된다.

한국의 인력수급전망 분석에 따라 직업별 인력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해외유학실태와 청년층노동시장 전망을 알아보고,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한국취업 및 체류의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에서 2023년까지 한국의 인력수급전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조관련 산업 분야의 기능인력, 서비스판매 등 유통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학력별로 부족한 분야를 보면 고졸은 단순노무종사자 부족규모가 가장 많으며,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에서 모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문대졸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인력이 가장 부족하며, 관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부족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는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약하면 고졸과 전문대졸 모두 기능 인력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중국인 유학생 인력은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나, 중국내 노동시장 전망에서 대졸자의 취업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 인력은 부족한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분포를 보면 학부생과 석박사생 모두 인문사회계열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또 이공계열 전공자는 중국으로의 즉시 귀환 희망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 취업과 체류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다. 그러나 중국내 노동시장 전망에서 대졸청년계층의 취업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자본과 기술의 GDP에 대한 공헌은 점점 더 커지고, 고용탄성치는 일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대졸자 수가 늘어나 고용시장에서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 대졸자의 기대임금은 높아졌지만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등 인력수급의 mismatch 현상이 다른 취업계층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국 유학생을 유치할 때 취업과 연계하는 유입전략을 통해 부족한 인력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중국인 유학생을 유

치할 때 산업 분야의 직업연계 교육이 가능한 전공분야로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매년 5만명 정도 중국인 유학생이 유입되는데, 이들이 취업연계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부족한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취업할 경우, 산업노동인력 부족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학력별 산업별, 직종별 부족인력 전망치에 기초하여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10년간(2014년-2023년)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규모는 고졸인력이 전문대졸 이상 인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급 부족이 예측되는 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며 제조업에서는 단순노무,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이며,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 모두 부족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즉 단순노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력 졸업자들이 다양한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력 수급 전망치를 보면 숙련수준별로 다양하고, 산업과 직능별로 다양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취업자격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도입 직종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국내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도입이 결정된다.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선별적인 유입전략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수요 결정에 객관성이 미흡하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분야의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이규용 외, 2014:171) 제기되고 있어 선별적 유입전략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위하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자료로 활용한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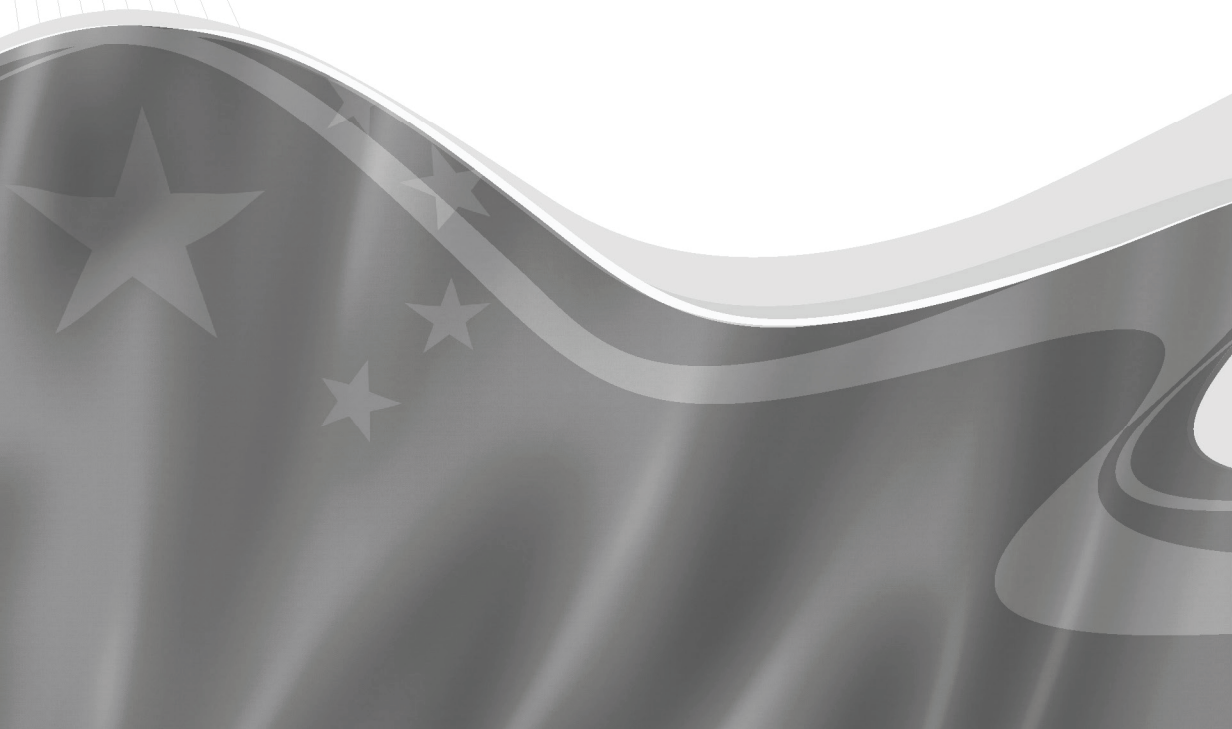
둘째, 선별 유입 전략 과제 중 두 번째로 제안하는 내용은 취업연계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내 인력 양성이다.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직접 활용하는 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산업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국인 숙련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은 당장 투입하기에는 숙련수준이 낮으며, 전문 인력은 인력 유입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 인력의 경우 유학기간동안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적응 등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한국 취업 연계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해외 우수 인재의 한국 유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 취업연계 맞춤형 유학을 통하여 국내 부족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 유학 비중이 높은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할 때 한국 대학 유학을 택하는 사례가 있으며, 한국 유학 후 중국 내 취업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취업 연계 맞춤형 유학은 유학 유인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유입규모를 보면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 2014년 5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 내 유학생의 출신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다. 통계청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졸업후 계획은 한국 체류 48.8%, 한국출국 51.2%로 거의 차이가 없다(통계청, 2014외국인고용조사 재분석결과, 3장 참조). 또 한국 체류의

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취업이 체류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인문사회계열전공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연계 맞춤형 유학은 반드시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국내 대졸자 취업시장과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양미선·이윤진·박원순  
중국 화동사범대 Jiaxiong Zhu  
중국 북경사범대 Minyi Li

□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핵심 요인인 유아교원교육 정책과 커리큘럼 분석을 통하여
-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 양국 유아교원교육 체제 및 주요 이슈를 비교, 논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이론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론보다 기능과 기술교육에 치중하며, 실습을 강조함.**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걸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 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 유아교원 현직연수는 집합교육 및 현장 중심 연수, 연수주제의 다양화, 교원 경력별 연수의 세분화가 요구됨.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

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한중 유아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는 자격체계, 교과목, 이수학점, 실습기간, 연수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한중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 상향 조정,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등의 공통과제가 있음.**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한중 유아교원교육의 차별화된 개선과제는 중국의 경우 영아교사 양성과정 마련, 한국의 경우는 유치원교원의 국가수준 전문성 기준 설정, 실습 강화 등임.**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 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한중 유아교원교육의 강조점은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이며,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승으로서의 도덕성을 강조함.**

향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사상에 부합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허영준·민주홍·이윤진  
중국 제남대학 이천우

-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



고급기술인력은 대부분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양성 공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고등직업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과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국정과제 73)한다는 목표 하에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방안의 핵심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 육성, 수업연한의 다양화, 평생직업교육대학 집중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 지원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취업률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문대학의 학습자원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2020년까지 졸업생 수가 급감하고, 전문대학을 통한 신규 인력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큰 축인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의 하나로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학습자원의 확보 및 취업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과 상호 협조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국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동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은 과거 10여 년간 지속된 문화 혁명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이 폐쇄되어 인재가 끊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초기부터 중국 동남 연해 및 일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 신형 지방대학-직업대학이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고등직업학교이며, 이러한 유형의 학교는 점차 발전하여 직업

성·지방성·실용성 등의 특색을 지니면서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고등직업교육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 각 지역 경제 건설에 급박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고등교육 구조의 개혁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 건설을 위하여 대량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으나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다. 예컨대, 설립 형식의 단일화, 이론 편중의 학습으로 실용 학습을 경시, 실제 활용 능력이 미약함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은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산동성 위해시의 교육전문가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 및 사회변동과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호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에 따른 양국의 동반성장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한중 양국의 인적 자원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 □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

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 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 □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

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주요 방안

### ■ 주요 내용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 ■ 방안의 방향과 전략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 ■ 주요 방안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 ■ 주요 제언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둥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형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IV.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  
상하이해사대학교 린궈룽  
푸지엔 사회과학원 리홍지에  
중산대학교 천공리  
다롄해사대학교 왕뉘  
칭화대학교 마오리신

### □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중국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을 활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중국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 중국 내 거점 지역의 해양실�크로드 추진 계획과 해외 항만 투자 현황을 조사하고
-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우선순위와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 투자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최우선 투자지역을 선정하고
- 투자지역별 항만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

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푸지엔(福建)성 취안저우(泉州)를 출발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운송로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철강, 철도, 건설 등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발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온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계획 등 지역개발 전략의 새로운 컨셉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1,000억 달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창설과 중국 주도로 2014년 12월 19일에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지 않다. 이는 중국의 다른 국가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기본 전략과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은 각 지방정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점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며, '정책소통'을 강조하면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기제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

다. 또한 올해 AIIB가 설립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각 지역의 산업구조, 발전전략, 경제환경, 물류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 □ 해외 항만 투자 우선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신용평가등급,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 □ 각 지역별 항만투자 사업은 인도 2, 스리랑카 1, 파키스탄 1, 말레이시아 1, 케냐 1 등이 유망

인도의 마하라슈트랑,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

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 □ 해외 항만에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해외 항만투자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실제 건설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성보다는 전략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비 회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어려워 정부차원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해외 항만투자를 위한 진출 전략을 제

안하고자 한다.

#### ■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하기 위해 AIIB에 가입하고, 57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협조가 없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거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II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전략적인 거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우리 관점의 타당성 여부, 추진주체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자금의 경우 AIIB를 통해 공동의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국내 내부 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으나, 국내의 정부조직의 운영상황으로는 전문성있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 ■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분야 ODA를 활용하여 전 세계 22개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케냐,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신해양실크로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항만분야 ODA 사업은 향후 주요 해외 항만에의 실질적인 투자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즉, 개발 컨셉, 기초 자료 및 시장 동향, 정부 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AIIB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ODA 사업을 이용하여 끊임없는 기초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ODA는 언타이드 원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투자시 우리 기업과 연계 전략을 펼치기 어려웠으나, AIIB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긴밀한 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 사업의 경우 당해 정부와의 관계 형성 여부가 사업 추진 및 성공 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향후 AIIB의 투자 형태는 현재 World Bank 그룹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요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한 대출과 더불어 지분투자도 병행하고,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IFC의 경우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입찰 관련 자문, 입찰 심사, 금융 자문 등 운영 단계 이전까지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경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선진 항만 및 해운관련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즉, 운영의 경우 GTO 또는 글로벌 선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 항만 투자사업 경험이 많은 건설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역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항만관련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항만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엔지니어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업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국제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또는 해외 사업에 경험이 많은 네덜란드 Royal Haskoning DHV 등을 모델로 하는 전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신해양실크로드에의 참여를 통한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역량을 가진 기업이 없다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항만 투자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ODA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민간에게 넘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항만관련 물류기업이 해외항만 등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선사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놓여 있으며, 국내 운영사의 경우에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과거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하였지만, 높은 수익률 요구에 따라 실제 이용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설립 후 5년만에 청산된 사례가 있다. 사모펀드인 국제물류투자펀드는

일반 금융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일반 금융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해외 사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AIIB를 통해 정부보증 없이 투자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외 주요 기업 대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국제물류투자펀드와 같은 형태의 지원형태는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수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서 해외항만 및 인프라 건설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인지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 ■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최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BPA)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GTO를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의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부산항도 항만기준으로 세계 6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항만운영사는 없는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항만의 경우 GTO의 참여를 우대한다던지, 글로벌 선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엔지니

어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 항만운영사가 없는 경우 참여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의 경우 해외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일부 있으나, 향후 해외 항만을 중심으로 한 거점 확보는 건설사에서 하는 업무영역이 아닌 운영사의 몫이기 때문에 건설과 더불어 운영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 거점을 상호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GTO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부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만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추종형에서 주도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선진적인 전문 항만운영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항만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맞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환적항만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은 이들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PSA, HPH, DPW 등 세계 유수의 GTO를 만들어 전 세계 항만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22개 GTO가 전 세계 항만물동량의 약 75%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용덕·정성삼·최영선

### □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및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 요인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5계획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바이오에너지는 12.5계획 기간 이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밀려 발전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가능 분야

### ■ 외국 기업의 진출 여건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가능 분야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분야의 경우 현재 세계 수준의 미국, 유럽 및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나, 유관 분야인 반도체, LCD 및 조선·해운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하에서 기업들이 꾸준하게 R&D를 통한 기술 진보를 이룬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와 ESS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및 스마트 시티 건설 분야 역시 중국 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스마트 시티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진출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이 제3국 공동 진출과 투자자금 조달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저가 제품의 해외시장 판매망을 확보한 상태지만,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가 제품이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과 같은 시스템 수출기반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중 양국 기업이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뒤에 공동으로 제3국 공동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신재생에너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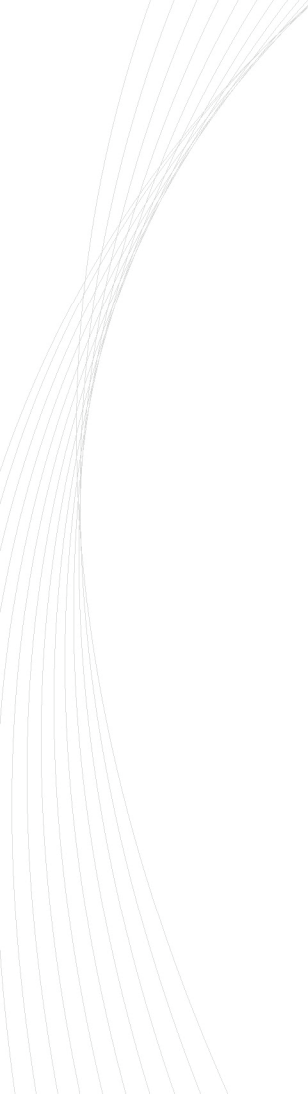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분야에서 해외 시장조사, 국내 실증사업, 국제적인 품질 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에 해당되며, 나중에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현지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비용을 최소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사모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행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행실적을 중요시 하는 해외 사업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 ■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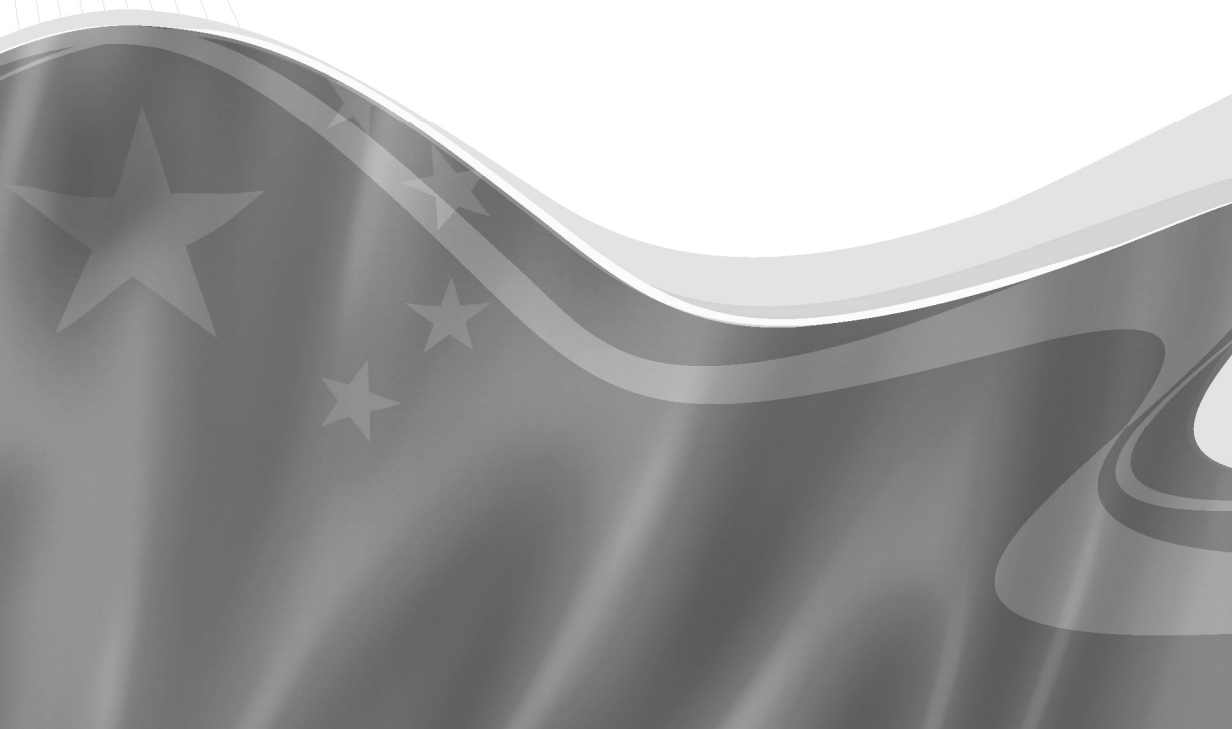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역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

진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초고압 송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내수 시장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었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해외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선두기업들의 생산수준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이양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들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對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V.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 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 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박창석·서양원·정성운  
중국환경계획원 동잔핑(DONG Zhanfeng)

### □ 환경사고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환경 사고 대응 협력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최근 한중 양국에서는 수질오염사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3년에는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발생으로 환경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 바 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매년 500여 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와 동부지역에서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도가 높은 동부지역이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 활동의 활발한 추진과 원자력 노후화 및 대규모 증설 계획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유출사고 및 방사능 오염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에 직면해있다. 특히 중국의 원전시설과 산업시설이 대부분 동해안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환경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가간 환경영향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환경사고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의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비교를 통한 양국 환경사고 방지 및 국가간 영향 대응 협력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환경사고 대응에 있어 한중 양국은 대동소이한 대응정책 및 시스템 운영 중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돌발사고응대법」에 두고 환경사고를 ‘재난’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돌발사고응대법」과 함께 「환경보호법」을 환경사고 대응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분야별 환경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에 있어서 양국의 제도적 차이는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운용에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모든 환경사고 유형에 포괄 적용되는 하나의 매뉴얼(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두고 있다. 대응 체계는 양국 모두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응조직에 있어서도 환경사고로 포함되는 사고 유형 중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보호 주관 부처를 책임부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법적, 조직 시스템에서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주목할 부분은 양국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체계로, 양국간 대응체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법적 체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전문 매뉴얼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반 환경사고와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한다. 또 대응 조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경사고대응 책임부처가 환

정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사고의 영향 범위에 따라 환경보호부와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양국은 환경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환경책임보험제도에 있어 아직은 양국 모두 초보적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법규를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추었으며, 중국은 제도 구축에 앞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중에 있다.

#### □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사고, 방사능 오염사고 등에서 양국의 제도적, 기술적 협력 수요 확인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분야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앞서 수행한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과 제도 분석과 환경사고 대응 기술 현황, 양국 전문가 제안 및 설문조사, 향후 양국의 협력 계획 등의 분석을 통해 양국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국 환경사고 대응 계획과 정책 분석을 통해서는 환경책임제도, 환경사고 예방관리 경험 및 기법, 환경피해 손실산정 기법 등 우수한 제도 및 기술의 공유와 신속 정확한 사고대응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환경사고 대응 기술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환경사고 예·경보 시스템 기술,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와 관리통제 및 손실산정 기술, 환경사고 피해예측 모델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 등에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전문가가 제안한 협력수요는 사고정보공유,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 환경사고 대응 협력단 구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환경사고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공동대응 지원 시스템 구축, 양국 환경관리 기준,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분야에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기법, 환경사고 인체건강 영향 통합평가 기술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 **중점 협력분야에서의 양국간 환경사고 공동 대응 협력을 통한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 필요**

이상의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은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과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춘 협력,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 제도·시스템·관리기법·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한중 양국 환경사고 대응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협력,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전략적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을 협력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분야별 협력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 조직 설치를 제안하며,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로 담당기관간 ‘(가칭)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단’의 설치·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과제로는 법적 시스템 및 기술적 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사고유형별 응급대응 법규 및 매뉴얼, 환경오염책임보험에 관한 법규, 화학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환경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등 기술적 부분에서의 협력 추진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어명근·임채환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李先德·孫政陸·劉合光·陳秧分·劉晉婧

□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을 파악하고
- 한·중FTA 체결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경쟁력을 계측하고
-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여 우리나라 농정에 반영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중 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중국의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환경 및 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중국 농업은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동력 유출과 인건비 상승,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과 육류, 낙농품 소

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월등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지만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쇠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 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품목구조 변화와 수출시장 현황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및 채소·과일·견과류 조제품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이들 부류의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 및 의약용 식물, 사료용 식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동식물성 유지 및 생산물,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과 수산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10%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비중은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2010년 이후 미국과 브라질의 비중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양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한·중 간 농산물 수출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이며 신선농산물은 홍삼과 유자, 밤, 난초 등이지만 수출액은 미미하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 한·중 FTA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로 단기적으로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자유화율(20년 이내 관세 철폐)이 품목 수 기준 64%(수입액의 42%)에 불과하다. 우선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어 농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20년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 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계측 결과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및 과실조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주요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실정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측한 결과 양파 및 쪽파, 마늘, 배추, 당근 등 채소류와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류 등 축산물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결과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양국간 무역보완성지수(TCI)와 무역결합도지수(TII)를 계측한 결과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강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FTA 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6개 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이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산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향후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전망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규·이승신·조고운·이현태·오종혁·양평섭·박진희  
·정지현·오윤미  
동덕여자대학교 서봉교  
산업연구원 조철

### □ 중국 경제의 변화성격분석 및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새로운 정상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에 대해서 보다 비관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중속성장 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에서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 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 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 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 □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시대에 중국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에서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농촌지역 등지에서 소비금융을 확대하고, 그 밖에도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에 의해서 중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초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분업구조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시기 중국 산업의 분석에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여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 경제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자동차 판매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 및 농촌에서,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 등을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 □ 중속 성장 시대의 중국 기업 정책 및 시사점

제5장은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 기업과 관련해서,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창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 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 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변화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5 규획 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정책을 대형 발전정책 하에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협조발전을 강화함

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한중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신창타이시대, 한중 통상관계 향방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의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 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에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뉴노멀 시기에 중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은 우수인재와 기술진보 등으로 전환될 것인 바,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R&D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향후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특히 내수용 중간재인 부품·부분품의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유망 소비재 발굴 및 진출 확대, 비교우위 업종(전자, 화학 등) 분야의 차별화 및 수출업종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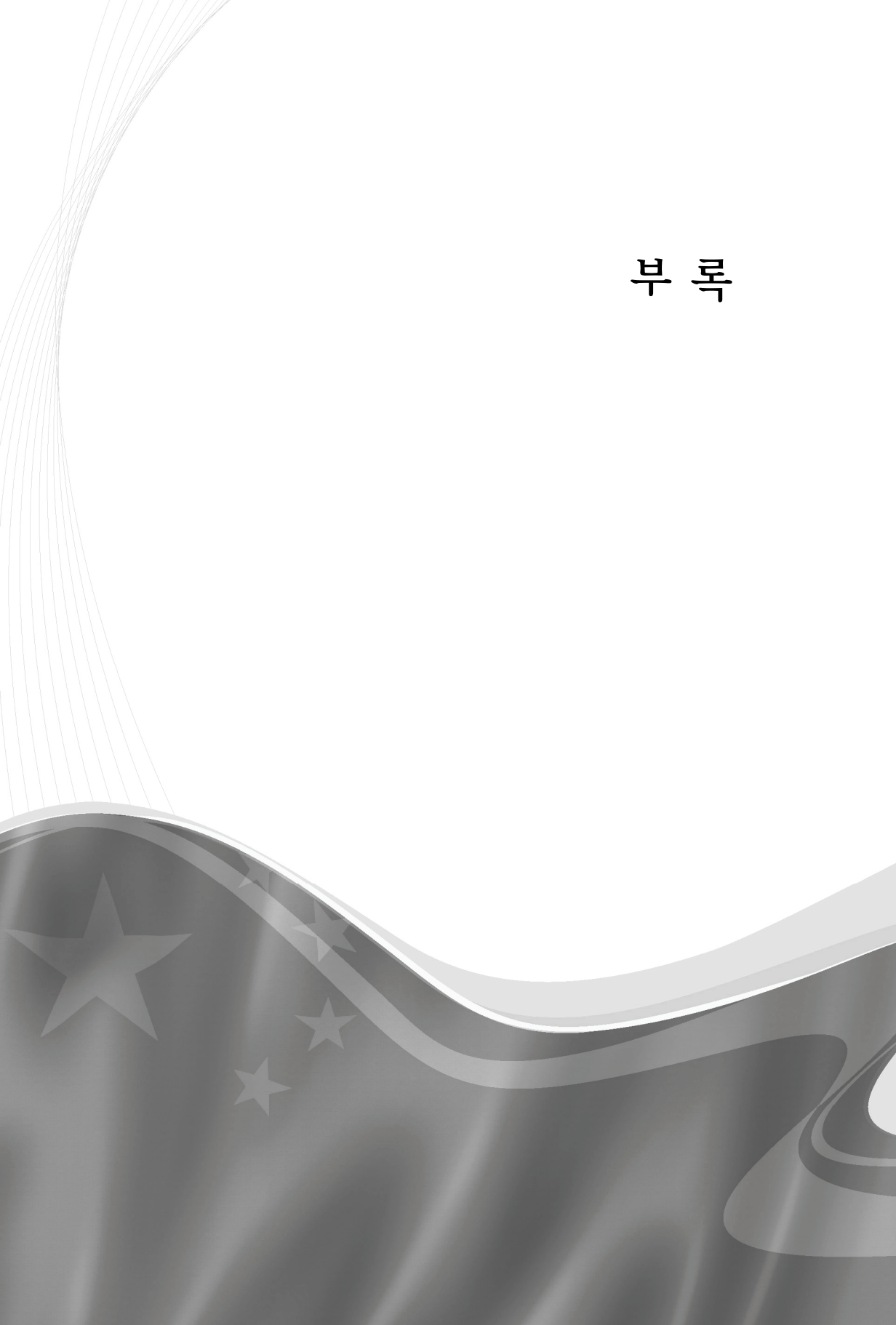
## □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정부 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 부 록



#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015년

2009~2011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nrcs.re.kr>) 협동연구총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2015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   |
|--|---|
| ■ 2009년 협동연구<br>(대외경제정책연구원)<br><br>(산업연구원)<br><br>(에너지경제연구원)<br><br>(해양수산개발원)<br><br>(국토연구원) | 09-01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 이장규 외                |
|  | 09-02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 이장규 외                |
|  | 09-0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3 / 이장규 외                |
|  | 09-04 부품소재산업의 중국시장 분석과 진출전략 연구 / 이문형·김화섭·김석진·김학기·조철   |
|  | 09-05 중국 부품소재 산업별 지역별 현황과 주요 제조업체 디렉토리 / 김화섭          |
|  | 09-06 중국 부품소재 유통구조 분석과 주요 유통업체 디렉토리 / 김석진             |
|  | 09-07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매뉴얼 / 이문형                           |
|  | 09-08 중국 부품소재산업 이슈리포트 / 김학기·조철                        |
|  | 09-09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1 / 박용덕 외        |
|  | 09-10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2 / 박용덕 외        |
|  | 09-11 한중 물류협력 연구(총괄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윤 |
|  | 09-12 한중 물류협력 연구(별책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윤 |
|  | 09-13 한중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 연구 / 이상준·김원배·김동주·정일호·서민호·신혜원   |
| ■ 2010년 기초연구   | 10-01 21세기 중국의 통치방식 변화: 정치·행정·법제의 종합적 분석 / 조영남(서울대)   |

- 10-02 중국의 아시아지역전략과 우리의 미래전략구상의 정합성 식별 / 윤덕민(일민연)
- 10-03 중국의 권력엘리트 총원문화·재생산 매커니즘과 그 정책적 함의 / 안치영(인천대)
- 10-04 중국 5세대 및 제6세대 지도부 분석과 외교정책 전망 및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 신중호(경발연)
- 10-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제도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서봉교(동덕여대)
- 10-06 중국경제의 발전동력으로서의 기업 / 강영삼(서울대)
- 10-07 중국 산업의 '추격' 전략과 한국기업의 대응 :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 은종학(국민대)
- 10-08 중국진출 구미·일·한 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중국사업 성공 방안 도출 / 정상은(한남대)
- 10-09 중국 조선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중소형 조선기업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신정식(보경연)
- 10-10 한중 양국의 무역결제시 양국통화결제 연구 / 구기보(숭실대)
- 10-11 한중무역에서 원화 및 인민폐의 무역 결제통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김흥기(한남대)
- 10-12 중국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고재모(협성대)
- 10-13 중국 IT 전자사전 발간사업 / 모영주(건흥)
- 10-14 재중 한인사회 연구 : 코리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 백권호(영남대)
- 10-15 한중 양국간 문화마찰 해소를 위한 소통모델 연구 / 남중호(한국외대)
- 10-16 중국 한류의 성과평과와 지속적 확산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 윤경우(국민대)
- 10-17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 이동률(동아연)
- 10-18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수용·교육·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문홍호(한양대)



- 10-19 중국 소프트파워 증진 정책의 뉴패러다임연구 :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 주성일(명지대)
- 10-20 중국 공산당의 통치수단으로서의 공자산업 활용방식과  
전망 / 이강범(중앙대)
- 10-21 붕괴되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수전 집체 마을의  
재생을 위한 연구 / 이병화(농업개발원)
- 10-22 중-북 접경지역의 도시화와 발전축 형성 동향 /  
박인성(한밭연)
- 10-23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 이승률(동북아  
공동체연)
- 10-24 한국의 중국학과 중국의 한국학의 연구추세의 비교분석 /  
이규태(관동대)
- 10-25 일본의 대중국 연구 현황과 시사점 / 김민수(인천대)
- 10-26 한국내 중국연구 지형도 분석 / 이정남(고려대)
- 10-27 중국 민사법상 토지용익권에 관한 연구 / 석희태(경기대)
- 10-28 중국 관광수요자의 권역별 성향분석에 따른 방한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현주(한결한)
- 10-29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우리의 시사점  
-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30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 제품 경쟁력 분석 /  
이문형(산업연구원)
- 10-31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 중심의 한중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 10-32 한중간 산업분업 모델 구축과 한국 서해안권의 산업입지  
전략 연구: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 권영섭(국토연구원)
- 10-33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시장 현황과 전망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34 중국행정개혁의 성과분석과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 이재호(행정연구원)
- 10-35 중국 정책연구 수요조사 / 이재호(행정연구원)

■ 2010년 정책연구(I)

- 10-36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37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안 /  
최수영(통일연구원)
- 10-38 중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유치 전략 연구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 10-39 중국의 개혁개방 항공전략 기초조사를 통한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김제철(한국교통연구원)
- 10-40 고령친화용품산업 수요기반 강화를 위한 중국시장  
연계방안 연구 /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41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지원정책(I) /  
김혜영(여성정책연구원)
- 10-42 국내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  
서문희(육아연구소)
- 10-43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0-44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 중국 장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45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 10-46 중국 12차 5개년계획과 주요산업별 한국의 대응전략 /  
이문형(산업연구원)
- 10-47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48 국내적 제약요인을 고려한 한중 FTA 협상 전략연구 /  
안세영(서강대학교)
- 10-49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 /  
백영서(연세대), 강준영(한국외대), 김제철(가톨릭대),  
정재호(서울대), 이근(서울대), 김시중(서강대),  
임윤선(관동대), 정영록(서울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원),  
이장규(대외경제)

■ 2010년 정책연구(II)

■ 2011년 기초연구

- 11-01 중국의 통상법제와 환경법제의 연계연구 /  
손기윤(인천대), 이충훈(인천대), 김호(중, 인천대),  
리밍(중, 북경대), 왕진(중, 북경대)
- 11-02 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 유형추이  
분석 / 박성수(세명대), 박주상(대구예술대),  
고강(중, 길림공안청)
- 11-03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의 WTO분쟁사안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 서석홍(부경대),  
서창배(신라대), 장지혜(부산외대)
- 11-04 한중 R&D협력모델 창출방안 연구 / 김완중(동아대),  
백권호(영남대), 유병철(동아대), 강준원(동아대),  
문철주(동아대)
- 11-05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 기초조사 /  
최규발(고려대), 정지수(고려대)
- 11-06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  
전성홍(서강대), 이동률(동덕여대), 김재철(가톨릭대),  
이희욱(성균관대)
- 11-07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에 대한 연구 /  
김태기(단국대), 김진호(단국대), 조한승(단국대),  
김학린(단국대), 임재형(단국대)
- 11-08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노동 법제가 미친 영향력 연구 /  
김동하(부산외대)
- 11-09 중국 기업구조조정(M&A)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윤현석(원광대), 이희성(원광대), 최문옥(중), (중국상해대학)
- 11-10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 / 이민자(신아시아),  
김천규(국토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 11-11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대응전략 - IT산업을 중심으로 /  
정상은(한남대), 서봉교(동덕여대), 황진영(한남대)
- 11-12 중국내 분야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 작성(성향별) -  
중국내 친한파/친북파 인사관리 /  
윤경우(국민대), 은종학(국민대), 양갑용(국민대)
- 11-13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행위자, 구조, 과정 중심 /  
안치영(인천대), 전인갑(인천대), 이남주(성공회대),  
장정아(인천대)

■ 2011년 정책연구

- 11-14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 연구 : 법원을 중심으로 / 조영남(서울대)
- 11-15 중국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실태 / 고재모(협성대), 권오박(협성대)
- 11-16 재한 중국유학생 취업실태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홍호(한양대), 김인(한양대), 민귀식(한양대), 신영미(한양대)
- 11-17 중국 우주항공 분야정책의 변천과정과 실태 / 김경민(사, 우주정책포럼), 송계익(강남대), 이상현((사)우주정책포럼)
- 11-18 한중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박상찬(경희대), 이상철(그리스도대)
- 11-19 중일관계와 일본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전략 연구 / 홍정표(서울대), 이종원(일본릿쿄대), 김익기(동국대), 공석기(서울대)
- 11-20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이규태(관동대), 구광범(관동대)
- 11-21 대 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이승신(KIEP), 광복선(KIEP), 정환우(KITA)
- 11-22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 이문형(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오영석(KIET)
- 11-23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 박용덕(KEEI), 이호무
- 11-24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 확보 방안 / 최수영(KINU), 전병근(KINU), 홍우택(KINU), 이기현(KINU), 박병관(INSS)
- 11-25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성인과 청소년 세대 비교 / 윤철경(NYPI), 오해섭
- 11-26 중국 동북지구 구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 김천규(KRIHS), 이상준(NYPI), 김홍(NYPI)
- 11-27 중국대학입시에서의 지역할당제 연구 / 구자역(KEDI), 이준식(성균관대), 박영진(용인대), 이경자(경상대)

- 11-28 한·중 간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손민정(KICE), 신항수(KICE), 김우석(인하대), 김진공(인하대)
- 11-29 전환기 중국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 서종원(KOTI)안병민(KOTI)
- 11-30 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 - 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  
유예리(KLRI), 박찬호(KLRI), 이준호(KLRI), 김은환(KLRI),  
손현진(KLRI), 이정표(부산대), 양효령(전북대),  
마광(중, 절강대)
- 11-31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 선우덕(KIHASA), 김수봉(KIHASA),  
이문형(KIET), 오영석(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 11-32 가족변화와 가족지원정책(III) : 중국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김영란(KWDI), 김혜영(KWDI), 장혜경(KWDI),  
김은지(KWDI), 최인희(KWDI)
- 11-33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중국 주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KMI)
- 11-34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개혁과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KIPA), 이수봉(중), (중국청년정치대)
- 11-35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 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 / 추장민(KEI), 이윤(KEI)
- 11-36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 한족과 조선족  
비교 - / 서문희(KICCE), 이윤진(KICCE), 최윤경(KICCE),  
박금혜(중, 연변대)
- 11-37 중국연구 인벤토리(1999년 이전 자료) / 최호진(KIPA)
- 11-38 GTI 지역상공인간 교역활성화 방안 /  
김진기(강원발전 연구소)

■ 2011년 기초심층연구  
(현대중국)

- 11-39 정치분야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 과정과 변화 / 정재호(서울대)  
중국 엘리트 정치와 정치구조 / 김재철(가톨릭대)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동학 / 김도희(한신대)  
중국 체제이념의 변화와 계속성 / 이희옥(성균관대)

11-40 경제분야

과거의 유산 / 김시중(서강대)

중국은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만수(동아대)

미래의 도전 / 은종학(국민대)

중국과 세계경제 / 남영숙(이대여대)

11-41 사회분야

중국인의 인간관계 / 김광익(서울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소비와 한류 /  
장수현(광운대)

현대 중국사회의 구성: 상업문화 및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정중호(서울대)

중국 문화유산의 정치학 / 장정아(인천대)

11-42 문화분야

中國人論 / 백영서(연세대)

문화 중국과 중국 사상 / 이욱연(서강대)

‘中華帝國’ 體制와 體制理念의 장기 지속성: 역사학적 접근 /  
전인갑(인천대)

사상으로 본 중국인의 국가 구상: 천하일가와 대동사회의  
이중주 / 양일모(한림대)

■ 2012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2-0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찬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철(중국인민대학교),  
양입용(중국인민대학교)

12-0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한의학정책연구원), 이준혁(한국한의학연구원),  
강승현(한국한의학연구원)

12-0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승호(국립강릉원주대), 김혜영(숙명여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2-0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지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수현(현대중국학회), 정계영(상해복단대학교)

12-05 중국의 종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박수해(연변대학교), 白美花(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2-0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박영진(한국교육개발원), 안병환(대진대학교)

12-07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윤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지언(영산대학교), 김도경(인하대학교), 주기평(서울대학교), 심형철(창덕여고), 김어진(쑤저우대학교)

12-0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 <제1부>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2부> 한·중 양국의 여성관리자 활용 비교연구 / 양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환(고려사이버대학교), 방진방(중국인민대학교)

12-0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석(서울사이버대학교), 이천우(중국제남대학교)

#### 중국 법·제도 연구

12-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해용(신라대학교)

12-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홍은기(호서대학교)

12-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강광문(서울대학교),  
오일환(중국정법대)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2-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현주(에너지경제연구원), 양광식(한결한주식회사)

12-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일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홍용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성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葛炬(신장농업대학교),  
董千里(장안대학교), 许茂增(충청교통대학교)

12-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노상우(한국교통연구원), 김천규(국토연구원),  
장동명(라오닝대학교), 윤승현(연변대학교)

12-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김홍(국토연구원), 김원배(중앙대학교),  
신태용(서울대학교),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2-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창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王济民(중국농업과학원)

12-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  
윤석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3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3-0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현황과 세계화 전략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I)-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 고용정책  
비교연구 /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3-05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13-06 중국 천인계획 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13-07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13-08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3-9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3-10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13-11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응에 관한 연구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3-12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13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 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13-14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 2014년 협동연구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3-15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3-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1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 김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4-01 중국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0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4-0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 구자익(한국교육개발원)

14-0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4-07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0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14-09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5년 협동연구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4-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4-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5-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15-0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5-0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5-0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민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